

'나라빚 빠른 증가율 1년새 127조 늘었다'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7.10. 한국일보는 「나라빚 빠른 증가율 1년새 127조 늘었다」 기사에서,
 -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,345.2조원으로, 지난해 5월(1,217.8조원)과 비교하면 1년 새 127조원(10.4%)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국가채무(저량, Stock)는 특정 시점의 잔액을 전년 동월과 단순 비교할 경우 국고채발행 및 상환스케줄, 추경 집행시기 등 변동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해석에 유의가 필요합니다.
 - 실제 127.4조원은 '단일 회계연도의 증가 규모'가 아니라, 서로 다른 두 회계연도의 반기('25년 하반기+'26년 상반기) 증가분*이 합산된 수치입니다.
 - * '25.5월말(1,217.8조) → '25.12월말(1,268.1조): 반기 증가 +50.3조원
 - '25.12월말(1,268.1조) → '26.5월말(1,345.2조): 반기 증가 +77.1조원
 - 각 반기별 증가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, 최근 1년간 채무 증가 속도 자체가 가속화된 것이 아닙니다.
 - 또한, '26년 계획된 중앙정부 채무 1,376.1조원(추경 기준)에 비추어볼 때, 5월 1,345.2조원은 예정된 정상수준이며,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.

- 지난 1년간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 악화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(통합재정수지-사회보장성기금 수지) 적자(△104.2조원)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 순증(15.7조원) 등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유사한 흐름입니다.
 - 금년 5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0.2조원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폭(+38.1조원)을 상회하였고, 통합재정수지는 12.1조원 개선('25년 △35.5조원→'26년 △23.4조원) 되었습니다.
-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채무 규모 이외에 GDP 성장능력, 이자지출감당 능력,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.
 - 현재 우리나라 부채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*으로, OECD**, IMF***등 국제기구도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
 - * 선진국 그룹별 일반정부 부채(D2) 수준('26전망, GDP%, IMF 기준):
[한국]54.4 vs [IMF 선진국]108.2 [유로]87.8 [G7]123.7 [G20]118.9
 - ** (OECD '26.7) "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", "GDP의 약 1%에 해당하는 두 차례 추경이 2년간의 부진했던 소비에 이어 25년 3분기부터 가계 지출을 끌어올렸다"
 - *** (IMF, '26.5) "26년 예산안의 재정기조는 적절하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"
 - 올해 무디스, S&P,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 국가신용등급을 '안정적'으로 유지한 점도 우리재정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줍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을 GDP 대비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소재찬 (altria@korea.kr)